

與, ‘1인 1표제’ 논란에 힘지 가중치 부여… 갈등해결은 ‘글썄’

대의원·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
‘20대 1’ → ‘1대 1’ 수정안 의결

지역위원회 무력화 우려 제기
외부세력 개입, 지역편중 문제도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차등을 없애는 ‘1인 1표제’를 추진하며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이 5일 중앙위원회에서 해당 당헌 개정안 의결에 나선다. 당은 1인 1표제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영남·강원 등 전라지역(함지)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해당 방안만으로는 갈등이 완전히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1인 1표’ 개정안에 약세·전략지역 가중치 부여 조항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해당 수정안에 따르면 가중치 비율은 2026년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 심의를 거쳐 당무위 의결로 결정될 예정이다.

민주당 ‘대의원·전략지역’ 당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 위원인 김문수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 보훈·역사 분야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SNS)에 이같은 사실을 전하며 “향후 대의원 역할, 지구당 부활, 전당원 투표권 및 요건 구체화 등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꾸준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수정안 의결에 나선다. 중앙위원회는 지역위원장 등 600명 안팎으로 이뤄진 당의 결기구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취재진들에게 “전략 지역에 대한 가중치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중앙위에) 상정, 의결하고 구체적인 가중치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부여할 것인지는 당헌·당규에 담을 수 없는 것이지만 대체로 전준위 심의와 당무위 의결을 통해 하는 방향으로 당

헌 개정안에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내 ‘뜨거운 감자’였던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란, 표 반영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민주당은 대의원 표에 더 높은 발언권을 준다. 몇 년 전까지는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60표에 맞먹는 권리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이던 시절 ‘1대 1’로 조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고, 이에 타협점을 찾아 ‘20대 1’로 조정한 바 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20대 1’인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1대 1’로 바꾸는 ‘1인 1표제’를 공약했다. 정 대표의 ‘1인 1표제’ 당헌 개정

은 공약을 시행하는 과정인 셈이다. 아울러 당원의 ‘직접민주주의’를 주장했던 대표 시절 이 대통령의 취지와도 맞다.

하지만 대의원은 각 지역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당의 ‘뿌리 조직’에 가깝다. 쉽게 말하면 지역위에서 행사에 가장 많이 참석하고 ‘일하는’ 이들이 대의원이다. ‘1인 1표’를 통해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이들의 권리가 무력화되면, 지역위에서 움직이던 조직이 흔들리게 된다. 그러면 중앙당(대표)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당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일각에선 “지구당 도입까지 빠르게 이뤄져야 지역위원회 무력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두번째 문제는 ‘외부 세력의 개입’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야권에서도 통일교나 신천지가 신도들을 당원으로 입당하도록 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전당대회 등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의혹이 있었다. 민주당의 ‘1인 1표’는 이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평가다.

세번째로는 지역 편중 문제가 있다. 민주당은 수도권과 호남에 당원이 압도적으로 많다. 상대적으로 열세인 영남·영동지역은 당원 수가 적다. 하지만 대의원은 각 지역별로 수가 비슷해, 일정 지역 의견에 쏠리지 않을 수 있다. 대의원제를 무력화시키면 ‘당의 전국정당화’는 실패하는 셈이다.

여권관계자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1인 1표가 맞긴 하지만, 이를 정착시키려면 ‘유령 당원’을 방치하는 게 아니라 실제 당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 운영체제가 이를 담보하지는 않는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활동량이 많은 이들이 대의원이나 상무위원들인데, 무작정 권한을 뺏는 것이 옳은 일인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李 대통령 “기여한 만큼 보장받는 공정한 성장 이뤄내자”

무역의날 맞아 산업 역군 초청 오찬
민주주의의 이어 산업화도 같이 조명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수십 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산업을 일궈온 산업역군들을 만나 “기여한 만큼 보장받는 공정한 성장을 이뤄내자”면서 노동·산업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역군 초청 오찬에서 “지금의 민주주의는 문화 역량이든 다 경제력에서 나온다”며 “경제를 뒷받침하는 과학 기술, 제조, 산업 역량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진 힘 그 자체”라고 했다. 이어 “놀라운 성과를 만드는 중심에 여러분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노동자들이 있다”고 감사를 전했다.

또 기업인들에게도 “전 세계를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 역군 초청 오찬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무역의 날을 맞아 조선, 자동차, 섬유, 전자, 기계, 방산, 해운 등에서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헌신해 온 산업 역군들을 재조명하고 그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뉴시스

시장을 개척하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물건을 만들어 팔아보려고 하는 치열함이 축적돼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국민을 대표해서 위대한 산업 영웅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의를 표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산업재해 발생,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

누는 ‘공정 성장’도 강조했다. 그간 성장의 과실을 일부만 독점했다는 문제의식을 재차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다른 것은 다 선진국이라는데 산업재해, 중대재해, 산재 사망자는 후진국”이라며 “이 문제는 우리가 꼭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는 분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가 다행히 하향곡선에서 바닥 찍고 상향으로 돌아서기는 했는데 이 정도로는 안 된다”며 “조금 더 성장을 강화해 새로운 기회가 많이 생기면 공정하게 기회를 누리고 기여한 만큼 보장받는 공정한 성장을 이뤄내서 우리 사회가 함께 손잡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꼭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무역의 날을 맞아 조선,

자동차, 섬유, 전자, 기계, 방산, 해운 등에서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헌신해 온 산업 역군들을 재조명하고 그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전날(3일) 12·3 내란 사태 1년을 맞아 ‘민주주의’를 강조했던 만큼, 이날 일정을 통해 민주주의의 실현을 가능하게 한 ‘산업화’도 같이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은 ‘민주화’, 보수정부는 ‘산업화’를 강조한다는 통념이 있는데 이 같은 선입견을 깨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이날 초청된 인사들은 산업 현장에서 장기 재직 후 은퇴한 산업역군 90여명과 지역기업인 8명이다. 특히 포스코 창립 멤버인 이영직 전 포스코 토건부 차장, 구로공단 1세대 여성 노동자인 강명자 구로공단 해설사(구로공단 미싱사), 최초의 국산차 ‘포니’ 탄생의 주역인 이충구(현합시스) 경영고문 등 우리 산업에서 굵직한 이정표를 세운 주역들이 함께했다.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당 지도부 향해 ‘尹 절연론’ 재차 촉구

정치적으로 절연해야 나아갈 수 있어
尹 전 대통령 소환하면 지선 못이겨

12·3 계엄 1주년을 맞아 사과 메시지를 낸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당 지도부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재차 촉구했다.

권영진 의원은 이날 오전 채널A 유튜브 방송 정치시그널에서 “이제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했던 정치세력과는 정치적으로 (절연해야 한다)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풀겠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더 넓은 민심의 바다로 나갈 수

있고, 보수가 살고, 국민의힘이 살고,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과거 선거에서) 완패했던 악몽이 있는데 지금 여론의 추이나 민심의 흐름을 보면 만약 오늘 선거라면 우리는 완패하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더 넓은 민심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결단과 새로운 변화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윤여계가 아니라 윤네 버가 돼야 한다”며 “진실되게 사과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반대로 가는 메시지를 내는 것도 윤석열과 단절의

한 일환”이라고 말했다.

전날 공개 계엄 사과문에 자신을 포함한 25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린 데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수가 이 취지에 공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처럼 됐을 때 지도부가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올리고 싶어도, 사과를 하고 싶어도 동참하지 않은 중진 의원들도 꽤 많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명확하게 장동혁 대표 체제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면서 “윤 전 대통령을 자주 소환하면 내년 지방선거 이길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李 대통령-손정의 회장, AI·반도체 협력 논의

〈소프트뱅크그룹〉

李 대통령, ‘AI 3대 강국’ 설명하고
소프트뱅크그룹 국내투자 요청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사진)과 만나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대통령실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이번 접견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이 배석한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AI, 반도체 분야 협력과 인프라 투자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에게 한국



의 ‘AI 3대 강국’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국내 투자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AI 3대 강국’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이 대통령은 앞서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 CEO 등 글로벌 AI 기업 총수들과 연달아 만나며 국내 AI 투자 확대와 기술 생태계 강화를 논의한 바 있다. 엔디비아의 경우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이 벌어진 GPU(그래픽처리장치) 26만장을 우리나라에 공급하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서예진 기자